

### 민주 지도부, 전북도청서 현장 최고위원회의

# 대통령실 의혹 등 '맹공'... 대정부질문 전초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전주를 찾아 민생을 강조하면서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다. 내주 예정된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 이뤄질 전방위적 공세 일면도 엿보인다.

지난 16일 민주당은 전북도청에서 두 번째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대정부 규탄 목소리를 냈다. 대통령실 이전과 영빈관 신축 예산, 쌀값 불안, 김건희 특별검사법 등 다양한 지적이 쏟아졌다.

먼저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대통령실 양치기 예산을 편성에 가뜩이나 민생고로 힘든 국민을 또 다시 속였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앞에 호언장담한 이전 비용 496억원이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이었음 이 또 확인됐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더 얼마나 더 숨은 예산이 나올지 우려스럽다"며 "대통령실은 한 손으로 국민 혈세를 펄펄 띄우면서 다른 한 손으로 민생 예산을 쥐어짜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당선인 시절 기존 청와대 영빈관을 활용할 수 있다고 밝힌 건 대통령 자신"이라며 "국민 앞에서 양말 뒤집듯 거짓말하는 것을 제대로 사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병도 전북도당 위원장은 민주당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규명단 출범을 상고하고 정부에 대해 "출범 1년 달을 넘겼지만 민생이 나아지지 않으니 민생이 없다"며 "제기된 의혹의 실체적 진실을 국민 앞에 명명백백 밝혀달라"고 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실 이

전 비용 496억원 든다고 했던 건 뻥이었나"라며 "국민 원성이 높고 국민 분노가 점점 일제같이 다다르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 영빈관 신축 예산 등 지적

박홍근 "양치기 예산 편성"

이재명 "여론 반하는 예산"

인사·신당역 사건 등 언급

또 "미국에 가선 전기차에 뺨 맞고 중국 박물관에선 한중일 청동기 유물전에서 고구려·발해 영토가 빠지는 불상사가 났다", "태양광으로 전 정부 꼬투리를 잡으려 한다"는 등 지적을 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국책은행 기업 여신의 민간은행 이관 시나리오가 추진되고 있다는 의혹을 언급하고 "공기업 정상화를 명목으로 국부를 유출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대통령실 이전과 영빈관 신축 문제를 짚고 "예부터 폭군, 망국 시기 왕은 본인만 위한 공전과 무덤을 짓기 위해 수탈하고 신하는 이런 행거러 백성 재산 뺏는 일이 벌어졌다. 말로만 듣던 그 일들이 버젓이 벌어 지려 한다"고 우려했다.

나아가 보건복지부 장관 인선 등을 지적하면서 "두 번 복지부 장관 후보자 낙마를 겪었음에도 달라진 게 없다"며 "문제 일으킨 인사에 재편이나 재검증 논의조차 없던 게 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지난 16일 전북도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정권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추진 관련 국민의힘 반발을 지적했으며,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쌀 매수 관련 페이스북 게시물 올렸던 점을 상기하고 "뒤로 영빈관 예산이나 집어넣고 있다"고 규탄했다.

더불어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을 언급하고 "특검을 거부하는 자는 주가조작을 비호하는 자, 특검을 거부하는 정당은 주가조작을 비호하는 정당"이라며 "특검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이른바 '신당역 사건'을 언급하면서 "과연 이 땅에 국가가 존재하는지, 대한민국이 내 생명을 지켜주는지 의문"이라며 "국민은 한 명 사방이란 표현 아래 수

자로만 존재하는 건 아닌가"란 생각을 가지지 말라"고 말했다.

또 "법과 원칙에 따라 잘못된 것은 처벌하고 빨리 해결해줬던 게 윤석열 정부 기조 아닌가"라며 "온 세상에 검찰들이 넘쳐나는 것 같은데 왜 그(피해자) 목소리가 이렇게 묵살돼야 하나"라고 지적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태풍 한남도 피해를 지적하고 "윤석열 정부는 피해 기업에 으뜸장을 놓고 있다. 피해 복구를 지원해도 부족한 판에 책임을 전가"라며 "피해도 억울한데 왜 피해 입었는지를 소명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조사 핑계로 정상화 시기가 늦어진다"며 "모든 건 윤석열 정부 책임"이라며 "천재지변까지 정략적으로 이용하지 말고 이제라도 국민

을 위한 작은 생각이라도 하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선 이재명 당대표 차원의 공개 지지도 있었다. 이 대표는 "깜짝 놀랐다. 영빈관 짓는 878억 원이면 수재민 1만 가구에 약 1000만원 가까이 쓸 수 있는 돈이 아닌가"라고 언급했다.

또 "국회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못하는 것 아닌가", "국민 여론에 반하는 예산을 통과되지 않도록 하는 건 우리 의무"라고 했으며 "현안을 찾아 신속 처리해 주는 게 국민에게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 영빈관 신축계획 전면 철회를 지시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으로 밝혔다. /뉴스

### 전북판 인권지도 제작 세미나 개최

전북판 인권지도 제작을 위한 세미나가 지난 16일 도청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전북도는 국가인권위, 학계, 교육계, 전북연구원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내 인권 역사 현장의 기억화 및 활용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북연구원 장세길 연구위원의 전라북도 인권역사 현장의 기억화 필요성과 추진방향 주제 발표 후 행사에 참석한 전문가들과 함께 인권역사 현장의 기억화 및 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과제 도출과 효과적인 사업 추진방향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특히, 장세길 연구위원은 "도내에는 전북대 44 개, 초남이성지 등과 같은 잘 알려지지 않은 인권역사 현장이 다수 있음에도 그동안 체계적인 조사와 기록화, 계승사업 등이 미흡했다"며, "전북의 특성이 반영된 인권 유산의 발굴·기록화와 문화콘텐츠개발 및 인권역사 현장교육 등을 통해 도내 인권역사의 체계적 정립과 인권의식 제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서울시에서 추진한 인권현장 발굴사업과 비교하면서 도내 인권역사 현장을 발굴·조사함에 있어 인권역사 현장의 상징성, 사회적 파급성을 고려하는 등 선정 기준(범위)과 유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전북도 정호훈 인권담당관은 "도내 곳곳에 산재한 인권역사 현장에 대한 기록화 작업과 이를 활용한 인권현장 교육 등을 통해 도민 누구나 쉽게 인권역사를 이해할 수 있도록 인권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인권 존중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전라북도 인권역사 현장에 대한 기억화 일환으로 전라북도 인권지도 제작을 추진하고 있다.

김경수 기자

## "한·중 상호협력 심화, 새로운 30년 위해 매우 중요"

김진표 국회의장, 리진수 中 전인대 상무위원장과 회담서  
공급망 안정적 관리 협력 강화·한중FTA 후속협상 제안

김진표 국회의장과 리진수(栗戰書)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국회의장 직)은 지난 16일 한중 수교 30년 기념 회담에서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양국간 전략적 소통의 중요성에 공감했다.

김 의장은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지속적인 소통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추후 진행을 제안하는 한편, 양국 역사 문제가 정치적·외교적 사안으로 비화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한중 국회의장 회담 후 공동 언론발표를 통해 "양국이 새롭게 변화하는 정세 속에서 상호 이해를 높이고 호혜적 협력을 심화시켜 나가는 것이 양국 관계의 새로운 30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한중 수교 당시 대비 양국 교역량은 약 50배 증가해 지난해 역대 최고치인 3000억달러를 돌파했고, 인적 교류는 80배 증가했다"며 "한중과 중국의 국제사회 내 위상과 역할 기대도 확연히 달라졌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런 인식의 연장선상에서 한중 수교 30주년을 함께 축하하고, 보다 건강하고 성숙한 한중 관계 발전을 위한 의회 간 협력 방안에 대해 폭넓게 협의했다"고 덧붙였다.

양국 의장은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해 기여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이에 김 의장은 한중일 정상회의 의장국임을 강조하며 리 위원장에게 한중일 3국 국회의장 회의 개최를 제안했다.

김 의장은 "리 위원장은 이를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했다"며 "일본 측과도 빠른 시일 내에 적절한 방식으로 소통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리 위원장은 "중한 고위급 교류를 강화하고 양국 간 각 분야의 대화와 협력체계를 활용하는 것이 양자 상호 이해와 신뢰를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인식을 같이했다"고 화답했다.

양국 의장은 한반도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면서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중간 전략적 소통을 지속해야 한다는 점에도 공감했다.

김 의장은 "중국은 그간 한반도 평화·안정 및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일관되게 지지해 왔다"며 "우리도 북한 도발에 대해 국제사회와 함께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하며, '담대한 구상'에서 보듯이 북핵 문제의 평화적·외교적 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한다. 중국 측의 건설적인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리 위원장은 "우리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고



김진표 국회의장과 리진수 中國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과 등 참석자들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담을 마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공동이익에 부합한다는 인식을 같이했다"며 "양측은 의사소통을 강화하고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프로세스를 추진하기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국 의장은 또 문화 콘텐츠 교류가 양국 국민의 마음의 거리를 좁힐 수 있다는 데도 공감했다. 인천-상하이 구간 등을 포함한 직항편을 조속히 재개하거나 증설해야 한다는 데에도 의견을 같이했다.

김 의장은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소통과 협력체계를 점검·강화하는 한편, 문화·서비스 시장을 더 높은 수준으로 개방하기 위한 한중 FTA 후속 협상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국민 건강과 삶에 직결된 미세먼지 문제 등

환경 분야에서도 조기에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기대했다.

리 위원장은 "양측이 발전 전략 연대를 강화하고, 호혜적 협력을 심화해 중한 FTA 2단계 협상을 가속화할 것"이라며 "공급망과 산업망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질 높은 통합 발전을 실현해나갈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역사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김 의장은 "2004년 8월 구두 양해에서 합의된 바와 같이 역사 문제로 인해 한중간 우호 협력이나 양국 국민 간 우호 감정이 손상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며 "역사 문제가 정치적·외교적 사안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양 의회 차원에서 적극 소통하고 관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뉴스

## 민원인 폭력으로부터 담당 공무원 보호

오현숙 도의원, 조례안 대표발의... 치유지원·안전시설 확충

민원인의 폭행으로 인한 공무원 보호를 위한 조례안이 제정됐다.



전북도의회 오현숙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이 '전라북도 민원 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394회 정례회에 대표발의 했다.

오현숙 의원이 발의한 전라북도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에 따르면 도지사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에 따른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치유를 지원하기 위해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에게

△심리상담 △의료비(한도 30만원)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과 휴식 공간 △법률상담, 형사고발 또는 손해배상 소송 △민원인의 폭언·폭행으로 인한 피해 치유 및 대응역량 향상을 위한 종사자 교육 및 연수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한 안전시설 확충 및 안전요원 배치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오현숙 의원은 "배종, 지진, 폭우, 폭설, 코로나19 등 각종 재난상황에 가장 먼저 현장에 달려가고, 이를 조치하는 사람은 바로 우리 공무원들임에도 불구하고 민원인들의 공무원들에 대한 폭언·폭행이 끊이지 않고 있어 안타깝다"며 조례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최근 경북 상주시와 부산 동래구, 전남 고흥군에서도 민원인이 업무 담당 공무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김경수 기자

## 고창군의원들, 정례회서 군정질문 '활발'

고창군의회(의장 임정호)는 16일 오전 10시 고창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92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집행부를 상대로 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나눴다.

먼저 임정호 의원은 '실질적인 국민체육센터 철거와 관련한 향후대책 수립', '부안면 복분자 유휴지 활성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박성만 의원은 '신입단지 분양계획 및 입주기업 고용계획 현황', '특색있는 시장길 개발로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 마련', '체육복지 증진 방안', '고창읍 중앙년초 화관 건립'에 대해 질문했다.

이어 이선덕 의원은 '농촌경관단지 조성 및 주요관광지 연계 집중화 추진', '학원농장 관광객 유출 방지 대책', '대규모 못 관광단지 조성', '고창 대표음식 전문가 양성 및 교육장

마련'을 촉구했다. 오세환 의원은 '노을대교 4차선화 및 동학농민혁명 성지화사업 추진', '대산면 외원교차로 주변도로 선형개량', '대산면 상곡리 돌맹미울 상수도 보급', '석산개발 변경에 따른 공문화 추진'을 촉구했다.

끝으로 차남준 의원은 '공모사업 추진의 문제점과 체계적인 관리방안 마련', '고창군 농촌 인력 수급문제'에 대해 질문했다.

임정호 의장은 "현장에서 들은 군민의 목소리를 의원들이 군정질문을 통하여 전달할 것"이라며 "군민의 복지 증진과 고창군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의 있는 답변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의원들의 군정질문에 대한 심덕섭 군수의 답변은 21일 제3차 본회의에서 진행됐다. /고창=김영식 기자

## 국힘도당, 국유지 무단점유 변상금 취소 소송 패소... 재판부 "적법"

국민의힘이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거했다가 부과된 2억여원의 변상금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사실상 패소했다.

지난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01단독 최기원 판사는 국민의힘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제기한 변상금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국민의힘이 변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캠코는 전주시 풍남동에 있는 국민의힘 전북 당사 국유지를 무단 점유했다는 이유로 2017년 12월~2021년 9월 총 2억2000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했다.

국민의힘 측은 전북 당사가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한 적이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국민의힘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면 국민의힘 당사가 국유지를 건물 외·

/뉴스